

2011년  
정책연구과제 1

본 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머 리 말

외교안보연구원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입안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외 정책기조 및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연구과제」로 엮어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연구원의 교수진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될 연구 결과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행본은 총 9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2011년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제정치·경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연구서가 우리의 대외정책을 입안·수행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 바라며,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위한 자료로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2월

외교안보연구원장 이 준 규



## 목 차

1. 미·중 간 세력전어로 인한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	김지용	1
2.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주요 이슈 전망	최 강	49
3.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김현욱	89
4. 중국 5세대 예상 지도부 분석	이지용	113
5. 북한·중국 경제협력의 실태와 경제적 가치 평가: 중국의 지속성장 관점을 중심으로	이상숙	143
6. 흑해 지역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방안	고재남	187
7. G20 정상회의의 발전 전망과 한국의 대응	이동휘	245
8.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배경과 의제	전봉근	283
9. 확산방지구상(PSI) 활동 강화 방안과 한국의 안보	한동호	333





## 미·중 간 세력전으로 인한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

김지용 / 객원교수

### 목 차

#### 요약

#### I. 서론

#### II. 세력전이의 가속화 및 불만족 표출의 본격화

1. 중국의 경제적·군사적·관계론적 힘의 증대
2. 국제적 차원에서의 불만족 표출
3. 지역적 차원에서의 불만족 표출

#### III.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

1. 중국의 도전전략: 스스로 결박하기 및 헤징유도
2. 미국의 대응전략: 물타기 및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What made the war inevitable was the growth of Athenian power and the fear which this caused in Sparta.

-Thucydides, 5<sup>th</sup> century B.C.

## 요 약

본 연구는 과학적 국제정치이론인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을 차용하여 미·중 간 세력전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증지표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경제력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조만간 경제적 세력전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미국은 향후 10년간 군비지출을 삭감할 예정인바 경제적 세력전이보다는 시기적으로는 늦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군사적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계론적 힘의 측면에서도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적인 제조 중심과 구매 중심이 되었다. 이에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민감성과 취약성이라는 권력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중국의 불만족도가 조사되었다.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미·중 간 세력전이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불만족도는 국제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되어 평가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미·중 간 동맹의 유사성이 매우 낮다는 것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중국의 표결행태가 도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국제활동이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중국의 현상타파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영토문제 해결방식이 근본적으로 선제공격에 기초해 있음을 명나라 시대의 무경칠서(武經七書)를 통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가 높을수록 중국의 영해분쟁 해결방식이 무력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중국의 국력이 증강할수록 중국의 불만족 표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나면 중국은 현실적 방안으로서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아직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시점에서 미·중 간 힘겨루기를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앞마당인 동아시아에서 스스로 구축하기



전략과 헤징유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동아시아에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 동아시아 전략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개입 전략인 몰타기 전략과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과 충돌하게 되었다. 현 상황에서 중국의 스스로 구속하기 전략은 공세외교로 인해 효용성을 잃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미국의 몰타기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많아졌다. 그러나 몰타기 전략의 성공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미국의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중국의 헤징유도 전략은 이미 상당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축적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 무역의존도 때문에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늘릴 수도 있는 미국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헤징유도 전략의 성공은 명백히 중국에 이로운 결과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헤징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미국과의 결속력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거인의 전략적 충돌의 향방은 중국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과 제1차 세계대전 및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적 교훈 그리고 과학적 국제정치이론인 전쟁으로 가는 단계이론(step-to-war theory)의 발견에 입각해서 본 연구는 세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안했다. 첫째,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바, 미국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맹의 총체적 힘으로 중국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불만족 표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이다. 둘째, 대중 무역의존도를 완화함으로써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3년 이후 한국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 외교·안보적 이익에도 부합된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중국과의 FTA 체결은 재고되거나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미국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에 참여하되 동맹의 경직성으로 인한 확전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6자회담을 당사국 간 패치워크(patchwork)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 I. 서론

미·중 간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동아시아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세계 국제정치학계의 최대 화두가 되었고 그러한 파급효과에 대처할 정책방안의 모색은 각국 외교계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과 관련해서는 대립적인 입장들이 상존하고 있다. 자본주의 평화론(capitalist peace)에 기초한 자유주의 입장은 국제무역 시장에 깊이 연루된 중국을 현존 국제체제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 또는 현상유지세력(status quo-power)으로 보면서 미·중 간 세력전이는 1930~1940년대 영·미 간 평화로운 세력전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Russett and Oneal 2001; Friedman 2000, 2007; Gartzke and Hewitt 2010; Mousseau 2010; Weede 2010). 이러한 전망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증가할수록,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중국경제의 개방화 정도가 높을수록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동아시아 주변국들 또는 미국과의 갈등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는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는 선린우호 정책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평화론은 18세기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1795년에 출간된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에서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 평화론의 효시가 되었다(Kant [1795] 1970: 114). 이러한 입장은 최근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자 리처드 콕덴(Richard Cobden)은 “자유무역은 신의 선물이다. 자유무역 이외에 사람들을 평화롭게 묶을 수 있는 물질적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역설한 바 있고, 19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드릭 바스티아(Fredric Bastiat)도 “재화가 국경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면 군대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지적 전통은 20세기에도 이어져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로즈크랜스(Richard Rosecrance) 또한 “타국의 재화를 손쉽게 획득하고 자국의 잉여

재화를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있어 자유무역이 정복전쟁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고, 미국의 정치학자인 헬렌 밀너(Hellen Milner) 역시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집단들의 정치적 힘이 커져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에 해가 되는 전쟁을 막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평화가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제시했다(Jervis 2002: 5).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직전과 2차 세계대전 직전의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의 수준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과 ‘당시 영국과 독일의 자본가들이 1·2차 세계대전에 반대하는 정치적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주의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자본주의 평화론의 설명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Waltz 1979; Kennedy 1980; Liberman 1996; Ripsman and Blanchard 1996/1997; Barbieri 2005). 오히려 그들은 국제무역 및 자본시장에의 참여를 통한 중국의 국력 증강이 현존 국제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현상변경을 시도할 기회창(window-of-opportunity)을 크게 열리게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심화는 부정적인 무역안보외부효과(negative security externality of trade)를 높일 것으로 본다(Gowa 1994; Mearsheimer 2001). 무역안보외부효과란 국가 A와 B가 무역을 한다고 했을 때, 무역을 통한 A국의 국력 증강, A국에 대한 B국의 무역의존도 심화 또는 A-B 유대관계의 강화가 B국의 국가안보에 미치게 되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는 급부상하는 중국의 공세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 견제연합의 형성을 억제하고 있는바, 이것은 부정적인 무역안보외부효과의 예에 해당한다(김지용 2011b).

특히 이 입장은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영해갈등 및 양안 문제가 경제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는 불가분한 쟁점들(indivisible issues)이기 때문에 중국을 힘으로 압도(power preponderance)할 수 있는 대중 견제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Tammen et al. 2000). 이러한 양측 입장의 차이는 급부상 중인 중국의 현상타파 시도를 낮은 확률(probability)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1%의 가능성(possibility)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의 문제

에 기인한다. 그러나 외교·안보정책은 최악의 시나리오(worst case scenario)를 상정하고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현실주의 입장에 정책적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Brooks 1997). 2010년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공세외교(assertive diplomacy) 및 2011년 11월 동아시아 지역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현실주의 입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간 세력전이의 현황 및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의 중국의 불만족 표출을 실증적 지표들을 통해 상세히 검토한 후 동아시아에서 각축 중인 중국의 도전전략과 미국의 대응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중국의 도전전략에는 “스스로 결박하기(self-binding)” 전략과 “헤징유도(hedging-inducing)” 전략이 있고 미국의 대응전략에는 “물타기(diluting)” 전략과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spoke-networking)” 전략이 있다. 중국의 스스로 결박하기 전략 및 헤징유도 전략은 각각 미국의 물타기 전략 및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과 경합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양국 전략 간 경합의 결과는 백중세(伯仲勢)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온 스스로 결박하기 전략의 성과는 최근 공세외교와 같은 자충수(自充手)로 인해 그 효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물타기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동아시아 국가들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신뢰를 얻었던 중국은 당시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 세계 금융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보다 업그레이드된 헤징유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미국은 서태평양 동맹국들·우호국들 간 양자 및 다자 군사협력의 활성화와 같은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최근에 와서야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헤징유도 전략을 압도할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 전략들의 우위를 평가·전망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 II. 세력전이의 가속화 및 불만족 표출의 본격화

### 1. 중국의 경제적·군사적·관계론적 힘의 증대

미국의 국력이 정점에 달해 있었고 미·소 간 냉전이 본격화되었던 1950년대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도전국가로 중국을 지목한 인물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이자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을 창시한 오르간스키(A.F.K. Organski)였다(Organski 1958).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당대 국제정치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국 국제정치학자들이 국력평가지표로 사용하는 “전쟁상관관계 프로젝트(COW: Correlates of War Project)” 데이터에 기인한다.<sup>1</sup> 인구(총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인구), 산업생산력(철강생산과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군사력(병력과 군비지출)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국력을 평가하는 COW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력의 합을 1로 보았을 때 1950년대 미국의 국력은 0.3을 웃돌고 있었고 중국의 국력은 0.09를 밑돌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당시의 전망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 그의 통찰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COW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추월은 199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1995년 미국과 중국의 국력은 각각 0.1406과 0.1356으로 미국이 우세했으나 1996년이 되면서 그 비율은 각각 0.1383과 0.1391로 역전된다(2007년에 이르면 그 비율은 각각 0.1425와 0.1986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세력전이론가들은 역사적 문헌자료, 통계학 및 수리모델을 동원한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미·중 간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최

<sup>1</sup> COW 국력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http://www.correlatesofwar.org>를 참조할 것. COW 국력평가지표는 기대효용생성 및 데이터 관리(EUGene: Expected Utility Generation and Data Manag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된다. 이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은 <http://www.eugenesoftware.org>를 참조할 것. COW 국력평가지표는 GDP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점(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0.85)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력평가 방법이다(Lemke and Werner 1996; Danilovic 2002).

초로 학계에 제기하게 된다. 그들의 과학적 발견에 따르면, 도전국가의 현상과 야망과 쇠퇴하는 패권국가의 예방전쟁 유인이 맞물려 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도전국가의 국력이 패권국가의 80% 정도에 도달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ganski and Kugler 1980; Kugler and Lemke eds. 1996; DiCicco and Levy 1999; Lemke 1997, 2002; Benson 2007a). 이런 맥락에서 중국 외교행태를 지칭하는 사자성어 또한 중국의 국력증강에 따라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1950~1970년대의 불칭패(不稱霸: 패권이라 칭하지 마라), 1980년대의 도광양晦(韜光養晦: 칼날의 빛을 칼집에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 1990년대의 유소작위(有所作為: 필요한 역할을 한다), 2000년대 초중반의 화평崛起(和平崛起: 평화롭게 일어선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의 돌돌逼人(咄咄逼人: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 등이 그것이다.

다소 성급해 보이는 세력전이론가들의 결론은 인구의 수(또는 병력의 수)에 많은 가중치가 부여된 COW 데이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현재 4,300달러인데 반해 미국의 1인당 GDP는 46,842달러로서 미국이 10배 이상 앞서고 있다. 또한, 군비지출에서도 2010년 현재 중국의 군비지출은 1,190억 달러(전 세계 군비지출의 7.3%)인데 반해 미국의 군비지출은 6,980억 달러(전 세계 군비지출의 42.8%)로서 약 6배 정도 차이가 난다(SIPRI 2010; 최우선 2011).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규모의 총량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규모의 측면에서 중국의 국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저명한 역사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그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군사력의 상대적 변화는 경제성장 속도 및 경제규모 총량에서 비롯되었음을 1500년부터 1980년까지 스페인 제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왕가, 프랑스, 영국, 미국의 예를 들어 보여준 바 있다(Kennedy 1988).

중국은 2001년 143번째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이 된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0년 명목 GDP(단위: 백만 달러)에서 중국(5,878,257)은 일본

(5,458,872)을 제치고 미국(14,657,800)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실질 구매력 평가지수인 GDP PPP(단위: 백만 달러)에서도 중국(10,085,708)은 일본(4,309,432)을 두 배 이상 차이로 제치고 미국(14,657,80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외교통상부 2011). GDP PPP로 볼 때 중국/미국 비중은 약 69%이기 때문에 미·중 간 경제적 세력전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양한 전문가 집단, 싱크탱크 및 국제기구 등 경제적 세력전이가 일어날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 잡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20년경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40% 정도 앞지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1994년도에 발표한 바 있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2036년, 세계적 전략경영자문그룹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 Waterhouse Coopers)는 2025년, 중국사회과학원은 2018년,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2027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16년을 중국의 미국 추월 시기로 예측하고 있다(김우상 1998; NIC 2009; Hawksworth and Cookson 2009; 이태훈 2009; 정경영 2011; 조운찬 201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일본이 미국에 도전했던 1939년 당시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의 30%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은 이미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Danilovic 2002).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해왔고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중국의 2010년 군비지출은 2001년에 비해 189% 증가했다. <표 1>에서와 같이 중국의 군비지출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보다 2배 이상 앞서 있다. 물론 질적인 측면을 논외로 하더라도 미국의 군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군비지출 비중은 <표 2>와 같이 1984년 이후 지금까지 19% 미만으로서 큰 변화가 없다.

&lt;표 1&gt; 2010 세계 군비지출

순 위	국 가	군비지출 (단위: 억 달러)	2001~2010년 증가율 (단위: %)	전 세계 군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 (단위: %)
1	미국	6,980	81.3	42.8
2	중국	1,190	189	7.3
3	영국	596	21.9	3.7
4	프랑스	593	3.3	3.6
5	러시아	587	82.4	3.6
6	일본	545	-1.7	3.3
7	사우디아라비아	452	63	2.8
8	독일	452	-2.7	2.8
9	인도	413	54.3	2.5
10	이탈리아	370	-5.8	2.3
-	한국	243	-	-
-	세계	16,300	50.3	100

출처: SIPRI (2010).

&lt;표 2&gt; 198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군비지출 비율

연 도	미국 군비지출 (단위: 억 달러)	중국 군비지출 (단위: 억 달러)	중국 군비 / 미국 군비 (단위: %)
1984	2,371	384.5	16.22
1985	2,582	398.6	15.44
1986	2,809	400.0	14.24
1987	2,882	416.2	14.44
1988	2,931	437.6	14.93
1989	3,041	451.0	14.83
1990	3,062	472.7	15.44
1991	2,803	461.5	16.47
1992	3,051	491.0	16.10
1993	2,976	516.2	17.35
1994	2,881	528.4	18.34
⋮	⋮	⋮	⋮
2010	6,980	1,190	17.05

출처: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1995); SIPRI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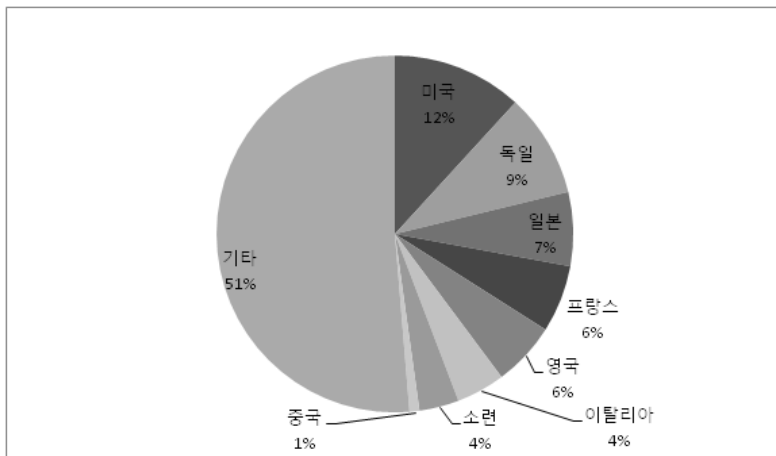


아울러 2008년 중국과학원이 발표한 ‘중국 현대화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력에서 2050년 이후에나 미국과 견줄 수 있고 2070년 또는 2080년이 되어야 군사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유용원 2012). 그러나 2011년 12월 말 현재 미국은 2조 4,000억 달러의 부채 감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5,000억 달러의 국방비(최악의 경우 9,000억 달러)를 삭감할 예정에 있고, 2012 회계연도 국방비를 5,700억 달러에서 5,130억 달러로 감축하였다. 이에 반해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평균 11.2%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10년간(보수적으로 예상하여) 연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함과 동시에 현 추세대로 군비지출을 증액시켜 나가면 2020년에 미국을 군사력에서도 추월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김현욱 2011; 정경영 2011). 특히 중국의 군비지출 현황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다. 최근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옌쉐통(閻學通) 소장은 중국의 군비지출이 GDP 대비 2%에 불과한 반면 다른 강대국들은 3.5% 이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비지출과 미국 군사력 추월은 중국의 정책에 달려 있음을 암시했다(최유식 2012).

이외에 미·중 간 군사력을 전 지구적 차원이 아닌 동아시아로 국한할 경우 항공모함 운용을 통한 군사력 투사(military projection)에서는 열세이지만 지역접근저지(anti-access/area denial) 능력 및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최우선 2011; 오관철·김기범 2012). 또한, 국제정치에서 국가 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역지력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공군력이나 해군력이 아닌 지상군이라는 점에서(Pape 1996; Mearsheimer 2001; Quackenbush and Zagare 2006), 두 개의 전쟁 포기, 해·공군 중심으로의 전력 개편 및 지상군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2012년 1월 5일 국방전략검토(Defense Strategic Review)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군사적 세력전이를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김성모 2012). 결국, 국력평가 방법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리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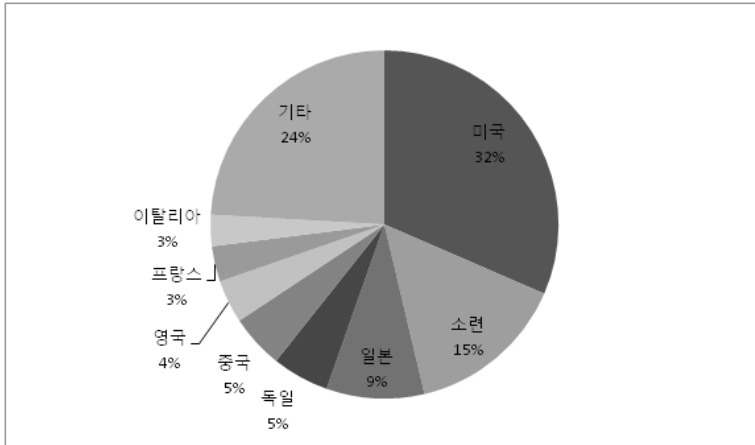
경제력과 군사력 이외에 관계론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급부상은 돋보인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은 권력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관계론적 힘은 매우 위협적이다(Keohane and Nye 1977). <그림 1>과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직후인 1980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무역 비중은 미국의 8%, 그리고 세계 제조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생산 비중은 미국의 15%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림 3>과 같이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중국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됨에 따라 해외자본과 생산시설 및 인력은 중국으로 빠르게 대규모로 유입되어 왔다. 저비용 생산기지와 광활한 시장을 제공하는 중국은 세계자본의 블랙홀로서 이미 2003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해외투자 유치국이 되었다.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 기업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누계액은 10,483.8억 달러에 달한다(중국 국무원 2011).

<그림 1> 1980년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주요국들의 무역 비중



출처: Danilovic(2002: 30)

<그림 2> 1980년도 세계 제조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주요국들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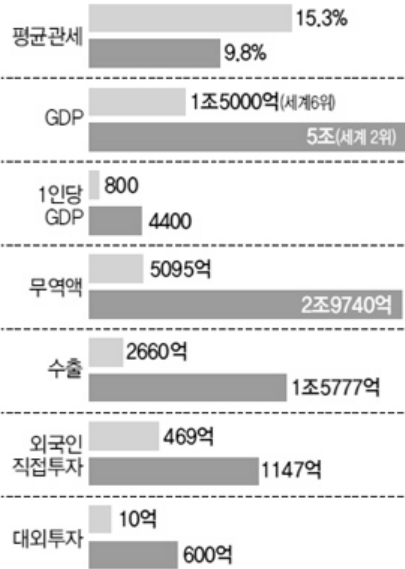
출처: Danilovic(2002: 34)

<그림 3> 2001~2010년 중국의 경제발전 항목별 추세

**WTO 가입 10년, 중국의 변화** (단위: 달러)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001년 2010년



출처: 박민희(2011b)

이는 19세기 말 미국이 중남미와 서유럽에 대해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면서 패권국가로 부상했던 것과 유사하다.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중심부 국가는 결국 경제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주변부로 이양하게 되어 장기적인 산업력의 쇠퇴를 맞게 되며, 이것이 국제체제의 세력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Gilpin 1975). 이외에도 2009년 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들의 현지 납세액은 106억 달러, 현지 고용 인구는 43.9만 명에 달한다. 그 결과 중국의 세계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율은 평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중국 국무원 2011). 특히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제조 중심(manufacturing hub)과 구매 중심(purchasing hub) 모두를 차지함으로써 “이중적 중심(dual hub)”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Hale and Hale 2003). 제조 중심과 관련해서 중국은 과거에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 상품을 제조하는 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자본·기술집약형 상품의 세계적 제조 중심이 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상품수출 총액은 1조 2,020억 달러로서 세계 상품수출 총액의 9.6%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세계 제조업 생산액의 19.8%를 점유하여 19.4%를 기록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조업 국가가 되었다.

또한, 2006년 세계 자본·기술집약형 상품수출 총액에서도 중국의 비중(16.9%, 홍콩을 포함할 시 24%)은 미국의 비중(16.8%)을 추월했다(Meri 2009; WTO 2010; Marsh 2011). 한편 2009년 중국의 상품수입액은 1조 60억 달러로서 이는 세계 수입총액의 7.9%(미국에 이어 2위) 및 해당 국가에 1,4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해당한다. 특히 수출용 제품과 관련된 원자재 및 중간재에 국한되어온 상품수입액의 비중이 줄고 대신 최종재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중국이 세계 1위의 자동차 판매시장과 2위의 사치품 소비시장이 된 것이 상징적인 예이다(조현준 2011). 따라서 세계 제조 중심과 구매 중심으로 부상한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강력한 관계론적 힘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무역정책의 변경에 따른 민감성(sensitivity: 중국이 수출입 통제를 할 경우 자국의 무역정책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게 되는 충격)과 취약성(vulnerability: 중국이 수출입 통제를 할 경우 자국의 무역정책을

변경한 이후에 받게 되는 충격)이 모두 높아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더욱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표 3>과 <그림 4>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그러한 비중은 2005년 46.3%에서 2010년 39.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를 제외한 여타 다른 지역들과의 무역은 증가하고 있다(북아메리카 제외).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성 심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하에 놓이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표 3> 중국의 주요 교역국별 무역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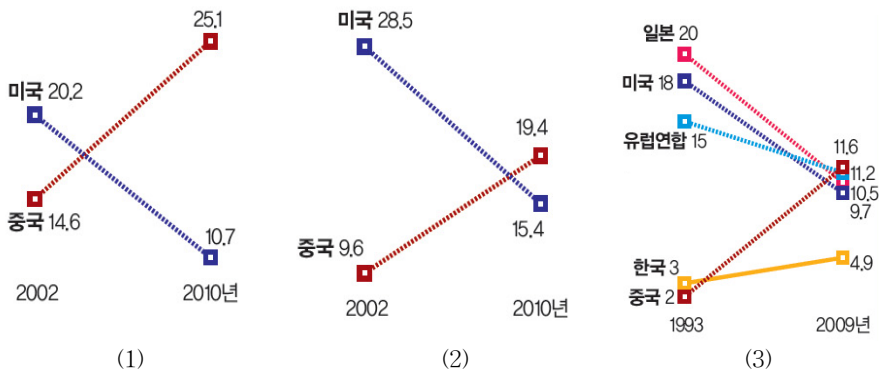
지역별 구분	무역 비중 (단위: %)		
	2005	2007	2010
동아시아 (14개국)	46.3	42.6	39.9
중앙아시아 (5개국)	2.7	3.1	2.8
서남아시아 (8개국)	1.9	2.4	2.7
중동 (6개국)	2.4	2.7	3.1
오세아니아 (2개국)	2.1	2.2	3.2
유럽 (27개국)	15.4	16.4	16.2
북아메리카 (3개국)	16.8	16.0	15.1
남아메리카 (10개국)	2.4	3.3	4.5
아프리카 (25개국)	2.6	3.1	3.8
기타	7.4	8.2	8.7
총계	100	100	100

출처: 조현준 (2011: 149)

소결하면 중국은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관계론적 힘에 있어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만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도전국가의 현상타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회(opportunity)”와 “의지

(willingness)”라는 두 가지 변수에 주목한다(Most and Starr 1989). 본 절에서 살펴본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및 관계론적 힘은 기회를 의미하고 다음 절에서 검토하게 될 중국의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의 불만족도(dissatisfaction)는 의지에 해당한다. 세력전이론가들에 따르면 1860년에서 1975년 사이 세계적 패권국가와 도전국가의 국력이 비등해진 시점(overtaking)에 발생한 군사적 위기는 총 10번이었다. 이 중에서 5번의 군사적 위기는 전쟁으로 치달았고 나머지 5번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Organski and Kugler 1980: 52). 세력전이론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도전국가의 불만족도의 높고 낮음을 통해 설명한다.

<그림 4> 한국(1), 일본(2) 및 ASEAN(3)의 대미 또는 대중 무역의존도



출처: 김기태(2011: 20)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만족도가 경제력, 군사력 및 관계론적 힘의 함수가 아니라는 점이다(de Soysa, Oneal, and Park 1997; Lemke and Reed 1998; Lemke 2002). 중국의 목표가 경제발전 및 국력증강이라고 해서 중국이 성공적으로 급부상 중인 자국의 현 상황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전제다(the “powerful-therefore-satisfied problem”).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약소국들(강대국들)은 전부 불만족(만족) 상태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국의 목표가 그러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함이다. 수단이 획득되

었다고 해서 불만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만족도는 다른 지표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세력전이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중국이 누누이 강조해온 화평발전(和平發展)에 대한 국제적 선언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국제적 무정부상태에 만연된 약속이행의 문제(commitment problem)와 군사력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al information) 때문이다(Fearon 1995; Powell 1999).

## 2. 국제적 차원에서의 불만족 표출

현존하는 국제체제에 대한 도전국가의 불만족도를 평가할 때 국제정치학자들은 ① 패권국가와 잠재적 도전국가 간 동맹의 유사성과 ② 도전국가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안전보장이사회 표결행태를 사용한다. 그리고 동맹의 유사성이 매우 낮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표결행태가 거부권이나 기권이 많은 가운데 ③ 도전국가가 적극적으로 국제적 활동에 참가하면 그것의 현상타파 성향은 매우 강한 것으로 간주된다(Bueno de Mesquita 1981; Kim 1991; Singnorino and Ritter 1999; Lemke 2002; Benson 2007b).

첫째, 패권국가와 잠재적 도전국가 간 동맹이 유사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치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동맹이 이질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국가의 불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권국가와 잠재적 도전국가 각각이 국제체제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와 체결한 군사동맹들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평가 지표는  $tb(\tau-b)$ 다. 이것은 -1과 +1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 지수로서 동맹이 유사할수록 +1에 근접하고 이질적일수록 -1에 가깝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에 미·중 간  $tb$ 는 -0.16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족도는 매우 높았고(1960년 미·소 간 그리고 중·소 간  $tb$ 는 각각 -0.27과 0.08), 미·중 데탕트 시기인 1970년대 초중반에 오면 -0.09,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0.06 정도로 감소하다가 중국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오면 다시 -0.12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동맹의

유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불만족도,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한 도전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중국의 표결방식이 기권이나 거부권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국제질서의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족이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1971년 유엔가입 이후 2008년까지 총 6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상임이사국들(미국 77회, 영국 24회, 프랑스 14회, 소련 및 러시아 15회)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적은 수이다. 그러나 그 중 4회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행사되었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미국(12회) 다음으로 많은 수에 해당한다. 거부권의 내용은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 및 에너지 문제와 연동된 것들이었다.

또한, 중국은 1997년 이후 2006년까지 총 23차례의 기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상임이사국들이 행사한 기권의 약 40%를 차지한다. 기권의 내용은 중국이 주장하는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 주로 미국이 제출한 안건이 대부분이었다(이동률 2007). 이러한 표결 추세는 유엔 후발참여국인 중국이 자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형성된 국제질서의 수용차원(passive rule-taker)을 넘어서 점진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규범과 질서의 창출(active rule-maker)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가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자 중국은 17개국 100여 개 국제단체의 시상식 불참을 주도한 바 있고 같은 해 12월 8일 공자평화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물론 공자평화상은 2011년 9월에 와서 폐지되긴 했지만, 이것 역시 자국에 유리한 규범의 창출을 시도한 예로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의 국제기구 참여는 2003년 당시 미국의 80%에 이를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Johnston 2003). 1949년부터 1978년까지 30년 동안 단 6차례에 불과했던 중국의 다자외교활동은 2005년 한해에만 13차례로 두 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2010년 현재 중국은 130여 개의 국제기구와 국제조직에 가입해 있고, 300여 개의 국제다자조약에도 서명한 상태이다. 그리고 2009년까지 161개국 및 30여 개 국제조직과 지역조직에 총 2,563억 위안의 런민비를 원조로 제공하였으며 50개 빈곤국의 채



무 380건을 감면해주었고 개발도상국민 12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2만 명이 넘는 의료지원단과 1만 명의 교사를 개도국에 파견하기도 했다. 아울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에 30여 차례 참여하여 약 21,000명을 파견했는데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것이다(중국 국무원 2011).

이외에도 중국은 2010년 현재 전 세계 171개국과 수교를 맺은 상태이며(아시아 46개국, 아프리카 49개국, 유럽 43개국, 미주 23개국, 대양주 10개국) 외국주재 중국공관의 수만 무려 249곳(대사관 166곳, 총영사관 69곳, 영사관 6곳 및 국제기구 사무소 8곳)에 달한다(외교통상부 2010).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국제활동의 배경은 국제질서에 대한 순응보다는 세력 확대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중국은 유엔 중심의 국제활동을 “더러운 국제정치 증권거래소”라고 비판해 왔고 이러한 입장을 1982년 중공 12차 전대까지 지속하였다. 그러나 예즈청(葉志成)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나 옌쉐통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같은 중국의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중국학자는 36개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동진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맞서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교활동, 비동맹원칙의 포기 및 준(準) 동맹성격의 다자안보협력체 설립 등을 강조해왔고 그 결과 중국의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김예경 2010).

중국은 1992년 14차 당 대회에서 “유엔의 역할을 중시하고, 유엔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엔과 안보리의 역할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1997년 15차 당 대회와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는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에서 충분한 역할을 발휘한다.”라는 입장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06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은 국제체제의 참여자, 옹호자 그리고 건설자이다.”라고 언급하였다(이동률 2007). <표 4>와 같은 입장변화는 9.11 이후 세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절하했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간한 『중국의 화평발전』에서 “국제사회

의 중요한 구성원인 중국은 유엔을 통해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어구가 네 차례나 등장했는데 이것은 현재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중국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중국 국무원 2011). 소결하면 동맹의 유사성,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표결행태 그리고 미국 견제차원의 적극적인 국제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국제적 차원에서 표출하고 있는 불만족도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lt;표 4&gt; 국제활동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

참여유형	비 주 도 국		주 도 국	
시 기	1970~80년대	199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이후
기본인식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소극적 주도	적극적 주도
주요화법	국제경제기구에 제한적 참여	정치, 안보, 사회 분야 국제기구 참여	새로운 규범과 원칙제시	국제질서의 단계적인 변화
	유엔 역할 긍정 (1985)	적극적 참여 (1992)	건설적 역할 (1995)	다자주의 주도 (2005)
참여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가입(1971)</li> <li>- 세계은행 및 국제 통화기금 가입 (1980)</li> <li>- GATT 가입신청 (198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펑(李鵬) 총리의 유엔 안보리 정상 회담 및 리오 지구정상회담 참석</li> <li>- PKO 군사고문단 파견(1990)</li> <li>- ARF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TBT 서명(1996)</li> <li>-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유엔창설 50주년 행사 참석</li> <li>- 1991~1996년 사이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 전체 기권의 64%에 해당하는 45회의 기권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1 이후 유엔 역할의 중요성 강조</li> <li>- 북한 핵 관련 4자·6자 회담 참여</li> <li>- 유엔개혁문건 (2005)</li> <li>- 인권A규약 국내 비준 (2001)</li> <li>- 1997~2008년 사이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li> </ul>

출처: 김예경(2010: 443), 이동률(2007: 109) 및 <http://www.globalpolicy.org/security/data/vetotab.htm> (검색일: 2011.11.28)를 재구성하였음.

### 3. 지역적 차원에서의 불만족 표출

현존하는 지역체제에 대한 도전국가의 불만족도를 평가할 때 국제정치 학자들은 주변국과의 영토·영해 분쟁의 해결방식을 평가지표로 사용한다(Kacowicz 1995). 주변국과의 영토·영해 분쟁의 해결방식이 신경질적이고 군사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체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강력한 국가재건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신생 독립국들은 영토구획과 관련된 분쟁을 도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 신생 독립국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역적 현상유지(local status quo)는 불안정해진다(Hensel 2006). 중국과 인접해 있는 14개국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들이기 때문에 중국과 그들 간 영토분쟁은 중국이 건국된 1949년부터 시작되었다. 광활한 영토 및 넓은 영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중국(내륙 국경선은 약 2.2만km, 해안선은 약 1.8만km)은 1949년 한해에만 주변 거의 모든 국가와 영토분쟁을 시작한 데 이어 티베트 침공(1950년), 대만 통제하의 도서(島嶼)에 대한 포격(1958년), 인도와의 국경분쟁(1962년), 소련과의 국경분쟁(1969년), 베트남과의 국경분쟁(1979년), 대만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발사실험(1995년)에서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했다.

물론 1949년부터 2005년 사이 중국은 영토가 인접한 14개 접경 국가들과 총 23번의 영토분쟁에 연루되었지만, 그 가운데 오직 6번만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영토분쟁을 군사력으로 해결한 비율은 26.08%에 불과했다(Fravel 2007/2008). 1949년에서 1985년까지 세계적으로 발생한 281번의 영토분쟁 가운데 군사력이 동원된 사례가 23.5%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Wilkenfeld, Brecher, and Moser 1988). 또한, 중국은 14개 접경 국가 중에서 13개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경문제를 해결했다. 일례로 중국은 1960년대(미얀마, 네팔, 몽골, 북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소련)와 1990년대(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미 국토의 90% 이상에 대하여 국경선을 확정 지었다(Fravel 2008; 유현정 2011). 또한, 중국은 1999년에

시작된 서부 개발사업이나 2003년에 시작된 동북3성 개발계획과 같이 평화적이며 경제적인 방식을 통해 영토문제를 해결해왔다(중국 국무원 2011).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 해결방식은 1950년대 대약진운동의 실패, 1989년의 천안문 사태, 1990년대 초반 신장소요사태 등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영토분쟁은 정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방식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고 동시에 국내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변경지역의 경제적 불평등 및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Fravel 2008). 이를 달리 말하면 중국의 국내 문제가 안정적이고 국내 결속력이 강화되며 중국의 국력이 부상하면 중국의 영토문제 해결방식 또한 평화롭지 않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앨러스태어 존스톤(Alastair Johnston)에 따르면, 현대 중국의 전략·군사문화는 한족(漢族)이 통치했던 명나라 시대(1368~1644)의 무경칠서(武經七書)에 기초하고 있다(Johnston 1995). 무경칠서는 손자병법(孫子兵法), 오자병법(吳子兵法), 사마법(司馬法), 위료자(尉繚子), 태공육도(太公六韜),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당태종이 위공문대(唐太宗李韋公問對)로 이루어져 있다. 무경칠서는 위협에 대항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사용은 상대방의 부도덕한 행위를 응징하는 것이므로 군사력의 선제사용을 옹호한다.

예를 들어 명나라는 자국을 위협했던 몽골계 북방 민족과의 영토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잦은 전쟁을 벌였다. 당시 명나라는 국내 반란이 일어나거나 자국의 국력이 열세일 때는 마시(馬市)를 통해 몽골 말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들을 수출하는 등의 화친정책을 구사했다. 그러나 국력이 우위에 있을 때는 항상 몽골을 공격했는데, 약 300년 동안 연평균 공격빈도수가 0.18번인 것에 비해 군사력이 강했던 성조 영락제 시기엔 0.27번으로 공격빈도수가 증가했다(이근욱 2009).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중국이 국내 안정과 국력증강을 모두 성취했을 때 무력에 의존한 영토분쟁 해결방식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영토분쟁은 인접한 국가 간 상대적 국력이 변화함에 따라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1990년대 확정된 중국의 국경 문제는 다시 갈등 국면

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경 문제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불만족스런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적 불만족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영해분쟁이다. 왜냐하면, 불만족도는 분쟁지역의 전략적·경제적 가치와 비례하기 때문이다(Walter 2003). 중국이 관여된 영해분쟁은 최근에 와서 심화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와 결부되어 있다. 자국 영토 내의 석유자원의 고갈로 인한 천연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양 영토 및 해양수송로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의 영해분쟁에 대한 입장은 전통적으로 공세적이고, 해결방식 또한 무력에 의존해 왔다. 특히 한 지역에서 양보하면 다른 분쟁지역에서도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중국의 공세외교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5개의 작은 섬과 3개의 암초로 구성된 센카쿠 열도(조어도)는 동중국해에 있다. 유엔은 1969년 이 일대에 흑해 유전에 버금가는 72억t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센카쿠 열도에서는 1970년(대만 선박이 이 지역에 대만 국기를 게양한 사건), 1978년(중국 선박이 이 지역을 침범한 사건), 1996년(일본의 우익단체가 등대를 설치한 사건), 2010년(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 2012년(시의원을 포함한 일본인 4명의 상륙)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배진수·강성호 2008; 정남구·박민희 2012). 센카쿠 열도는 1895년 청일전쟁 직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태평양전쟁 직후인 1951년 미국으로 이양되었다가 1971년 다시 일본으로 복귀되어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중국은 1534년에 중국인이 센카쿠 열도를 처음 발견했으며, 청나라 강희제 때 중국인들이 신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는 역사기록을 제시하면서 자국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이성우 2011).

다음은 108개의 작은 섬, 사주, 환초, 암초로 구성된 난사군도와 130여 개의 산호섬과 암초 그리고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시사군도가 있는 남중국해이다. 1960년대 말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s for Asia and the Pacific)의 전신인 아시아극동경제 위원회(ECAFE: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가 남중국해에 석유,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주석 등이 매우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영유권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1992년 2월 영해법을 제정함으로써 남중국해 전체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도서의 인근 수역을 중국 내해로 규정하였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약 280억t의 석유와 7,500km<sup>3</sup>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지역은 전 세계 물동량의 50% 이상이 운반되고 있으며 매일 1천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운송될 만큼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손기웅 2011). 따라서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브루나이 등이 전면적·부분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베트남이 24개(1,500명의 병력이 주둔), 중국이 10개(450명), 대만이 1개(100명), 필리핀이 7개(100명), 말레이시아가 6개(90명)의 도서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김동욱 2009).

마찬가지로 어업기지로서의 중요성과 인산질 비료로 사용되는 구아노(guano)가 풍부한 시사군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1974년과 1988년 중국과 베트남 간 대규모 해상군사충돌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5월 26일에는 시사군도에서 중국이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소속 석유탐사선 탐사케이블을 절단함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어 6월 초에는 필리핀 어선에 대한 중국 함선의 발포가 있었다. 이외에도 중국은 이 해역에서의 자유통항권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2007년 미국 항공모함 ‘키티호크호(Kitty Hawk)’의 홍콩 입항 거부, 2009년 3월 8일 이 지역에서 정찰 활동 중이던 미 해군 소속 ‘임페커블호(USNS Impeccable)’에 대한 중국 군함의 퇴출 명령 등으로 맞서고 있다. 수입원유의 85%가 이송되는 남중국해를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있는 중국은 2012년 8월 1일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바랴크(Varyag)함을 남해함대에 배치할 예정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영해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상은

중국의 국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불만족이 보다 많이 표출되고 있다는 신호를 의미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격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제체제는 ①국가보다 상위의 단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상태 ②공격적 군사력의 존재 ③불확실한 상대국가의 의도 ④국가들이 최우선시하는 생존이라는 목표 ⑤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들의 존재라는 다섯 가지 요인들로 특징지어진다. 그 결과 국가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편으로서 자국이 위치한 지역 또는 대륙에서의 지역패권을 추구하게 된다(Mearsheimer 2001). 중국의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의 불만족은 미·중 간 세력전리가 일어날 때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이며 그러한 표출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Ⅲ.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sup>1)</sup>

#### 1. 중국의 도전전략: 스스로 결박하기 및 헤징유도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는 중국의 앞마당인 동시에 1990년대 후반은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이 퇴조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의 도전을 미국과의 힘겨루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litmus) 시험지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도전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스스로 결박하기(self-binding) 전략으로서 이것은 미국의 관심과 관여가 저조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9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를 발판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까지 포섭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국제정치이론에 따르면, 중국은 동아시아 국

<sup>1)</sup> 이 부분의 주요내용은 필자의 보고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둘러싼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방안”(김지용 2011a)을 수정·보완한 것임.

가들의 정치적 발언권(voice-opportunity)을 보장하고 패권지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결박하고자 하는, 또는 자신의 이해관철을 자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Ikenberry 2000).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이해관계 및 이념을 은연중에 제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자국의 패권적 지위가 상실될 때를 대비해 미리 유리한 조건을 사전에 제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Pomfret 1988; Eifird and Genna 2002; Pedersen 2002). 스스로 결박하기 전략은 “매력공세(charm offensive)”로도 지칭될 수 있는데, 1995년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국내 비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주도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과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 창설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 등이 그것이다(이재현 2011).

마찬가지로 이 전략은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위안화 절하,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 메콩강유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 경제협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 그리고 ASEAN 및 한·중·일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제안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관련해서 중국은 정치적 부담을 갖는 상대 국가를 배려하여 ‘민감품목’이나 노동·환경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형태의 점진적인 무역자유화를 지향했다. 이것은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식의 FTA보다 많은 호감을 이끌어내고 있다(최원기 2010). 그러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북한 처리방법을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 일본·필리핀·베트남과의 도서영해 분쟁에서 보여준 무력시위, 태국·베트남이 연루된 메콩강 유역에 무장병력 1,000명을 주둔시키기로 한 결정, 미얀마 미트소네 수력발전소 백지화 관련 강한 유감표명, 2011년 12월 서해에서



중국 선원에게 피살된 한국 해경사건과 관련된 중국의 뒤늦은 입장표명 등등 2010년 이후 나타난 중국의 공세외교는 스스로 결박하기 전략의 성과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위협론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이 동아시아에 재관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크게 열리고 말았다. 2011년 11월에 잇달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와 EAS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라.”와 같은 미국의 공세적 발언이 쇄도하는 가운데 중국은 “일개 국가가 정한 규칙이라면 지킬 의무가 없다.” 또는 “동아시아 회의체의 결속력에 방해되는 각종 요인은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희 2011a). 이에 대해 중국 내 국제정치학자들도 중국의 외교정책이 위기에 직면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2011년 11월 17일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왕이저우(王逸舟) 교수와 주펑(朱鋒) 교수는 각각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와 연합조보(聯合早報)에 기고한 글에서 “2010년 1년 동안 중국과 아시아 주변 국가의 외교는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심각해졌다.” 그리고 “항상 평화로웠던 남부 국경지역이 지금은 가장 적대적인 지역으로 변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한강우 2011).

둘째, 헤징유도 전략으로서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인정하되,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 무역 심화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의도하는 강력한 대중 견제연합의 등장을 억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와 같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의 비중은 2002년 20.2%에서 2010년 10.7%로 절반이 줄어든 반면, 대중 수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4.6%에서 25.1%로 많이 늘어났다. 일본은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의 비중이 28.5%에서 15.4%로 줄어든 반면, 대중 수출의 비중은 9.6%에서 19.4%로 대폭 증가하여 대미 수출을 압도하게 되었다. ASEAN의 경우에도 대미 수출의 비중은 1993년 18%에서 2009년 9.7%로 줄어든 반면, 대중 수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2%에서 11.2%로 증가하여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 국가가 미·중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헤징전략을 추구하게끔 하는 데 유효했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헤징유도 전략의 성공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책임 떠넘기기(buck-passing)로 인한 강력한 대중 견제연합 형성의 실패를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책임 떠넘기기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①중국과의 FTA 체결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 ②미국(buck-catcher)과 냉각기를 갖는 것 ③중국이 미국을 보다 손쉬운 상대로 보게끔 자국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것 ④중국과 직접 대결하기보다는 미국(buck-catcher)과의 FTA 체결 등을 통해 미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Mearsheimer 2001). 이 중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책임 떠넘기기는 주로 ①과 ④에 해당한다. 그 결과는 대략 <표 5>로 요약될 수 있는데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네트워크가 미국의 네트워크보다 약간 우위(다시 말해 중국의 헤징유도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lt;표 5&gt;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및 미국과의 FTA 추진현황

	한국	일본	ASEAN	미국	중국
미국	●	×	▲	-	×
중국	▲	▲	●	×	-
●: FTA 발효, ▲: 공동연구 진행, ×: 전혀 논의 없음					

그러나 2011년 11월의 동아시아 지역 정상회의들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헤징유도 전략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중국견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바, 이 전략 역시 스스로 결박하기 전략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최대 자산인 경제력이라는 당근과 무력시위라는 채찍으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11월 18일 ASEAN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차관 및 신용제공으로 100억 달러(약 11조 3,000억 원)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조용하게 헤징유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11월 17일 중국은 “호주가 군 기지를 이용해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돕는다면, 호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십자포화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이례적 경고를 하는 동시에 2011년 11월 23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북해 함대 소속 군함 6척을 서태평양 쪽으로 기동하게 함으로써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서태평양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무력시위를 했다. 이에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호주 국방장관은 11월 22일 “미국, 중국과 더불어 삼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동시에 군사적 전용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반대해 온 호주 동가라 지역의 우주 지상국 단지 내 중국 위성추적 지상국 설치를 허가했다(정의길 2011).

아울러, 2011년 12월 1일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기 직전인 11월 28일 중국 차기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중국을 방문한 민 흘라잉(Min Hlaing)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접견자리에서 양국 간 포괄적·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 군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것 역시 미얀마 헤징유도 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미얀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2011년도 세계 금융위기를 자국의 위상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고 더 강력한 헤징유도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내수경기를 크게 부양하며 외환 부족국에 달러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위상과 신뢰를 크게 높인 바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습효과에 기초하여 더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헤징유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2. 미국의 대응전략: 물타기 및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 아프간 전쟁 및 이라크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군사력에 기반을 둔 일방주의적 체제변환외교(regime transformational diplomacy)를 구사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 반미정서가 확산되었고 이는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2009년에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는 세 개의 전쟁이 진정 또는 종식 국면에 들어서자 전임 행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최근 국가부채 상한선 조정 및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고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는 수출 및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는 출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바,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필요했다. 가장 중요하게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급부상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까지 참여한 ASEAN+3 (ASEAN+한·중·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동아시아에 두게 된다. 미국은 두 가지 전략으로 대중 경제 메커니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는 물타기 전략으로서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협의체에 직접 참여하여 중국의 외교정책에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중국과 참가국들의 관계를 훼손시키거나 멤버십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또 다른 조직을 주도하는 전략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ASEAN+3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친미 성향인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EAS에 미국이 2010년 가입한 것이나 같은 해 중국과 함께 아세안국방장관회의플러스(ADMM+: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에 가입한 것이 그 예이다(이재현 2011). 미국은 이미 2009년 11월과 201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EAS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아세안의 주도하에 정치·안보 현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원기 2010). 그리고 2011년 11월 19일 개최된 제6차 EAS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바오 총리에게 “남중국해 항해자유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EAS 18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남중국해 해양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것은 2010년 4월 ASEAN 정상회의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지지하는 것이었다(박민희 2011a).

아울러 미국은 EAS가 남중국해·핵비확산·재난구조협력과 같은 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의도한 지역협력체가 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1962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얀마는 미국 주도하의 국제제재 대상이었다. 미국은 1990년 미얀마에 대한 통상 및 관세제재법안을 통과시켰고 2003년 자국 내 미얀마 자산을 동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11월 18일 EAS 회원국인 미얀마 정부가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해제 및 정치 수감자 석방 조치를 취한 직후인 12월 1일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였다. 이것은 인도양 진출 출구 및 서부개발사업과 연계된 자원 확보 때문에 정치·경제적으로 미얀마를 지원해 왔던 중국의 공든 탑을 무너트리기 위한 포석이었다. 동시에 미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민주주의 확대보다 개발·지원을 강조하는 2010년 12월의 4개년 외교·개발검토보고서(QDDR: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김성한 2011).

유사하게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경우에도,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면서 ASEAN+3와 멤버십이 어느 정도 중첩되는(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 필리핀·일본·한국은 검토 중) 범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적극 주도하고 있고 ASEAN+3 회원국이자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비준했는데 이것 역시 물타기 전략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스스로 구속하기 전략의 성과가 최근의 공세외교로 인해 흔들리게 되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미국의 물타기 전략이 상대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물타기 전략이 중국의 스스로 구속하기 전략을 압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감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두 전략 간 경합을 통해 미·중 간 우위를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둘째는 <표 6>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으로서 이것은 미국의 서태평양 동맹들 또는 우호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인도 간의 양자, 3자 또는 4자

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바퀴축과 바퀴살(hub-and-spoke) 동맹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바퀴축과 바퀴살 동맹체제는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비효율적일 수 있다. 하나는 바퀴축이 바퀴살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바퀴살과 바퀴살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퀴축을 거쳐야 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이다. 미국의 서태평양 동맹들은 공동의 적이 아닌 개별 국가에 국한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미국의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지역 차원의 안보 문제를 인접 동맹 간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국을 거쳐야 할 경우 정책수행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2011년 6월 4일 상그릴라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퇴임을 앞둔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서태평양 동맹국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진배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고, 후임자인 리언 파네타(Leon Panetta) 국방장관 역시 10월 26일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일본 방위성 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서태평양 동맹국들은 중국전제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전제를 위해 미국의 관여가 요구된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10월 12일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의 인터뷰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전략이 미국의 서태평양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정의길 2011).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존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이 구상했던 <그림 5>의 사회주의권 봉쇄망인 제1열도선(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과 제2열도선(일본-괌-팔라우-호주)의 재정비·강화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미국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은 기존 동맹들과 미국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이 중국의 해징유도 전략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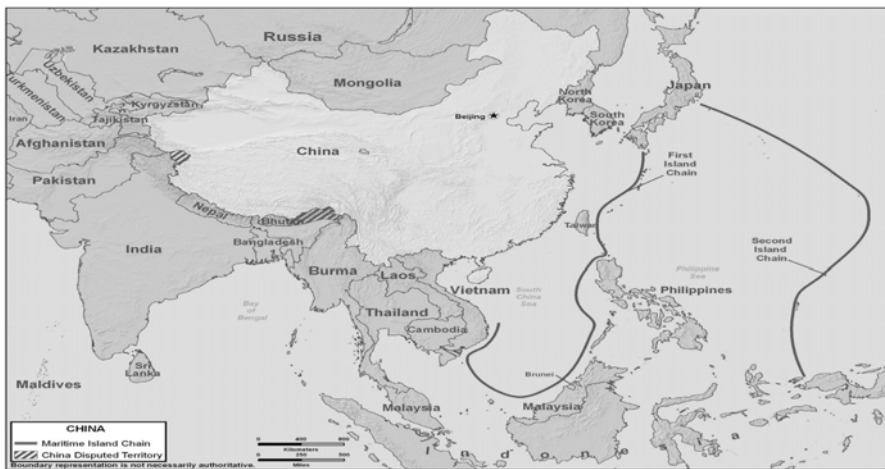
상의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상황은 정반대이다. 비록 미국의 군사 전략 중심이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했지만, 이것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군사력의 증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2년 1월 5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국방전략검토는 사실상 경기침체와 국방비 감축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의 목표와 능력의 격차는 결국 동맹국들이 전력증강과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미국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의 최근 현황

현황	참여국가	시작일시
30년 만에 미 전함의 필리핀 캄란만 기지 방문 및 미국-필리핀 동맹 60주년을 기념하여 필리핀 해군력 강화 지원 발표	미국, 필리핀	2011년 8~11월
한국, 일본, 괌, 필리핀 외에 미국의 중국 견제 군사거점 추가를 위해 호주 다윈 로버트슨 해군기지에 미 해병대의 상시 주둔 합의(2012년 250명에서 시작하여 2016년까지 2,500명 순환배치) 및 미군 항공기의 호주방문과 기착기지의 확대 합의	미국, 호주	2011년 11월
미국-호주-뉴질랜드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 Australia, New Zealand 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의 복원을 위한 웰링턴선언(Wellington Declaration)	미국, 호주, 뉴질랜드	2010년 11월
일본-호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일본, 호주	2010년 5월
일본-호주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JDSC: Japan-Australia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Cooperation)	일본, 호주	2007년 3월
3자 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및 3자 안보국방협력포럼(Trilateral Security and Defense Cooperation Forum)	미국, 일본, 호주	2008년 6월
한·일 간 협의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	한국, 일본	2011년 1월
한·미 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에 대한 일본 참관 및 미·일 연합해상훈련 ‘예리한 칼’에 대한 한국 참관	한국, 일본	2010년 7~8월
한국-베트남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 선언	한국, 베트남	2009년 10월
일본-필리핀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 선언	일본, 필리핀	2011년 9월
3자 조정 및 감독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한국, 미국, 일본	1999년 4월

현    황	참여국가	시작일시
코브라 골드(Cobra Gold) 해상훈련	미국,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981년 (한국은 2010년부터 해병대 파견)
남중국해 인근 베트남 나짱 군항에 인도 군함 주둔 협의 및 베트남 해·공군 현대화 지원 협의	베트남, 인도	2011년 7월
전략대화 및 국방대화 강화, 합동군사훈련	미국, 베트남	2008년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 및 최신예 F-16 C/D 전투기 24대 공급	미국, 인도네시아	2005년
민간 핵 협력, 전략대화 및 국방대화 강화, 인도군의 현대화 지원	미국, 인도	2005년
아시아 4자 구상(Asian Quadrilateral Initiative)	미국, 일본, 호주, 인도	2007년 8월

<그림 5> 제1열도선(First Islands Chain)과 제2열도선(Second Islands Chain)



출처: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검색일: 2011.11.28)

이런 국면에서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은 중국이 공세외교를 지속함으로 인한 반대급부이다. 그러나 2011년 11월 동아시아 지역정상회의들에서 곤욕을 치른 중국은 당분간 공세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표 3>과



같은 비대칭적인 경제적 상호의존을 이용한 한층 강화된 해징유도 전략(예를 들면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서의 상당한 양보를 통해 한국과의 FTA 체결)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두 전략 간 경합에서는 중국의 우위가 예상된다. 소결하면 중국의 스스로 결박하기 전략과 미국의 물타기 전략 간 경합의 결과는 균형상태에 있는 반면, 중국의 해징유도 전략과 미국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 간 경합에서는 중국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동아시아에서 벌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결에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역사는 반복된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황금시대(*La belle époque of economic inter-dependence*)였던 191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노만 앤젤(Norman Angell)은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고(Angell 1913), 그 당시 그 어느 누구도 1914년에 1,5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과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가동되었던 독일공장들의 굴뚝들이 영국을 향한 대포”(Kennedy 1980: 315)였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전쟁의 일차적 원인은 영국과 독일 간 세력전이였다. 1860년대 영국의 산업생산량은 전 세계의 약 25%를 차지했으나 1913년에 이르면 10%대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반해 급부상했던 독일의 산업생산량은 이미 1890년에 영국을 추월하여 1913년에 이르면 전 세계 산업생산량의 15%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 속도는 영국의 두 배에 달했다. 그리고 독일은 이러한 산업생산력을 세계 2위의 해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티르피츠 계획(Tirpitz Plan)’에 투자했다.

당시 독일의 팽창야욕은 중국의 공세외교와 같이 한꺼번에 모든 유럽 국가들을 적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영제국 관리를 위해 영국은 프랑스 및 러시아와 함께 독일을 포위·압박했고 독일은 그러한 포위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은 독일의 해군 전력이 영국에 비해

열세인 가운데 발발했다. 예를 들어 양국의 해군력 비율(영국:독일)은 대형 전함, 구전함, 순양함,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에서 각각 20:13, 40:22, 110:46, 300:144, 78:28이었다. 이와 함께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평화에 대한 지나친 자만이었다(Nye 2000).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중 간 세력전이의 현황, 중국의 불만족 표출정책,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21세기에 세계질서를 뒤흔들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전쟁 지역은 동아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Mandelbaum 2004). 전쟁과 평화의 일반원인과 일반조건들을 규명하는 국제정치학은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미래를 전망하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들이 있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불만족 표출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은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다.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날지라도 동맹세력 간 세력전이는 막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또는 미·호동맹 같은 강력한 동맹국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유일한 두 개의 방위동맹 조약 중 하나인 1950년의 중·소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은 조약 체결 30년 후 폐기원칙에 따라 이미 종료되었다. 또한, 1961년에 체결된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2021년까지 연장은 되었지만, 그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있지만 SCO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견제하에서 운영되고 있고 회원국 간 정치적 결속력이 아직은 미약하다.

둘째, 한국은 대중 무역의존도를 완화할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커질수록 한국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추진은 재고되거나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미국과의 FTA, TPP 참여, 그리고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 중동 및 남미 국가들과의 FTA가 강화되어야 한다. 2011년 11월 30일 현재 한국은 1개국과 FTA를 타결지었고 44개국과 FTA를 발효 중이며 12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17개국과 FTA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이 모든 FTA 대상국들은 세계 GDP의 61%에 해당하는 넓은 경제영토다(김병섭 2011; 김희승·정은주 2011).

셋째, 한국은 지역분쟁 관리를 위한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 세력전이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치닫게 한 촉발원인은 세 차례에 걸친 역내 국가의 내전 및 역내 국가 간 분쟁이었다(Thucydides [460 BC-395 BC] 1954). 그러한 분쟁들은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개입을 불러왔고 이것이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그리스 국가들이 하나의 사슬에 묶여 줄줄이 끌려 들어가듯이(chain-ganging) 확산된 이유는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대립했던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이 경직된 두 개의 동맹체제, 즉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때문이었다(Christensen and Snyder 1990). 이와 유사하게 1816년부터 2001년 사이 발생한 국제분쟁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전쟁으로 가는 단계이론(steps-to-war theory)에 따르면, 영토분쟁이 전쟁으로 치닫게 될 확률은 영토분쟁 당사자들이 역외 국가를 동맹으로 보유할 때 가장 크다(Senese and Vasquez 2008).

따라서 미국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에 참가하되 영토분쟁이 만연한 동북아시아에서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한국은 6자회담이 당사국 간 패치워크<sup>2</sup>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가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Cha 2011). 6자회담은 한·미·일과 북·중·러 두 세력의 의견이 충돌하는 자리이기에는 하나 두 세력을 가로지르는 한국이 포함된 3자 또는 4자 협력 관계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누적을 통해 한국은 실(thread)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역내 안정에 이바지하는 패치워크 형태의 다자안보협력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은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아래로부터 위로(bottom-up)의 접근방

<sup>2</sup> 패치워크(patchwork): 여러 가지 차별적인 색상, 무늬, 소재의 작은 천 조각들을 서로 꿰매어 이어 만든 한 장의 커다란 세공품

식이다. 한·중·일 관계, 남·북·러 관계, 한·중·일·러 관계, 한·중·러 관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관리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한·중·일은 1999년 이후 매년 ASEAN+3에서 3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2008년부터는 별도로 이를 정례화하여 재난구호 및 해적퇴치와 같은 비전통분야 다자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독자적인 포럼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2010년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의 결과로 2011년 9월 27일 3국 협력 상설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되었다(정경영 2011).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또한 추진되고 있다.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스도입 및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11년 8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가스관 북한 통과 및 특별 실무그룹 구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동년 10월에는 남·북·러 실무그룹 연쇄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 2013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가스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의 최대 쟁점은 가스 통과국인 북한 관련 리스크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가스관 사업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상쇄하고 러시아의 관여를 통한 북한 상황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강태호 2011).

이외에 한·중·일·러 군사협력이 장관방문, 고위인사방문, 국방정책 실무회의, 안보정책협의회, 정보교류회의, 합참 간 회의, 육군 간 회의, 해군 간 회의, 방산군수 공동위, 위탁교육, 수탁교육, 국방 관련 협정체결, 수색 및 구조 훈련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을 패치워크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한·중·일 관계, 남·북·러 관계 및 한·중·일·러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SCO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한·중·러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6자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바퀴살 네트워크 강화 전략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불만족 표출을 힘으로 억제하고, 무역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며, 6자회담 당사국 간 다층적 패치워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불만족도를 대화로 관리해 나갈 때, 한국은 미·중 간 세력전이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제안들에 대한 반론들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트랫포(Stratfor-Strategic Forecasting)의 설립자이자 베스트셀러 『100년 후(The Next 100 Years)』의 저자이면서 유명한 군사정치 전문가이기도 한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은 그의 책에서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Friedman 2009). 그는 미 제국이 앞으로도 500년 동안 유지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은 급속하게 붕괴하고 일본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본 연구의 정책적 고려사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붕괴가 임박하다 할지라도 중국은 현재의 능력만으로도 이미 위협적인 존재이며 붕괴로 인한 좌절은 중국의 불만족도를 배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저널

- 강태호. 2011. “러 에너지 무기화…유치경쟁 한·중·일과 밀고 당겨.” 『한겨레』 (2011/11/16).
- 김기태. 2011. “한국과 FTA 둘러싼 미중일 삼국지.” 『한겨레21』 (2011/11/14).
- 김동욱. 2009.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정치·군사학 측면.” 『독도연구저널』 제5호.
- 김병섭. 2011.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비준 추진 방안.”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23.
- 김성모. 2012. “미국, 새 국방전략리뷰 발표, 2개 전쟁 수행 포기.” 『조선일보』 (2012/01/05).
- 김성한. 2011.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구』 제16권 2호.
- 김예경. 2010. “중국의 안전보장제도와 정책.” 함택영·박영준 편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서울: 사회평론.
- 김우상. 1998. 『新한국책략: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서울: 나남.
- 김지용. 2011a.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둘러싼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방안.”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35.
- \_\_\_\_\_. 2011b.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의 재검토: 동맹의 신뢰성과 무역 자유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 \_\_\_\_\_. 2012.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전망: 일반이론들로부터의 연역적 분석.” 『외교안보연구』 제7권 제2호.
- 김현욱. 2011. “미국 국가부채 상한선 조정과 국방예산 삭감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28.
- 김희승·정은주. 2011. “전세계 17곳과 무차별 협정 추진…대외정책 발목 우려.” 『한겨레』 (2011 /11/30).
- 박민희. 2011a. “미, 대중국 파상공세…두 정상 긴급회담서도 칼날 설전.” 『한겨레』 (2011/11/ 21).

- \_\_\_\_\_. 2011b. “10년만에 세계2위 경제대국…수출 중심 성장은 한계로.” 『한겨레』 (2011/12/ 08).
- 배진수·강성호. 2008. 『세계 분쟁 해결과 NGO 네트워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손기웅. 2011. “인지심리학의 함의를 통해서 본 영토분쟁의 다자적 해결방안.” 한국정치학회 추계 학술대회. 전주. 11월.
- 오관철·김기범. 2012. “미·중 소리 없는 군비경쟁, 장군! 명군!” 『경향신문』 (2012/01/05).
- 외교통상부. 2011. 『중국 관련 주요 통계(2010년 말 현재)』. 서울: 외교통상부.
- 유용원. 2012. “한국軍, 서해에서 중국 맞춤형 전략 고심…中항모 대응 소형 잠함·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 『조선일보』 (2012/01/02).
- 유현정. 2011.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중국의 국경지역 안보.” 『글로벌정치연구』 제4권 제1호.
- 이근욱. 2009.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동률. 2007. “유엔에서의 중국 외교행태에 대한 실증 연구: 안보리 표결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제3호.
- 이성우. 2011. “국제레짐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동아시아 영토역사갈등의 대안으로서의 레짐이론.” 한국정치학회 추계 학술대회. 전주. 11월.
- 이재현. 2011. “미국의 대 동남아 재관여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참여: 달라진 환경과 새로운 도전.” 『외교안보연구』 제7권 제1호.
- 이태훈. 2009. “중국의 시대 예상보다 빨리 온다.” 『조선일보』 (2009/08/26).
- 정경영. 2011.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과 한국의 출구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대회. 서울. 12월.
- 정남구·박민희. 2012. “시의원 포함 일본인 4명 센카쿠열도 상륙.” 『한겨레』 (2012/01/04).
- 정의길. 2011. “호주, 대중국 봉쇄 기지화…중 십자포화 휩싸일 것.” 『한겨레』 (2011/11/18).

- 조운찬. 2011. “중국 실질 경제규모 5년 뒤엔 미국 추월.” 『경향신문』 (2011/04/26).
- 조현준. 2011.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가능성에 대한 소고.” 『한중사회과학연구』 제9권 제1호.
- 중국 국무원. 2011. “중국의 화평발전.” 『국가전략』 제17권 제4호.
- 최우선. 2011.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주요국제 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24.
- 최유식. 2012. “中전략가 국제사회 中군사력 수요 커져…中韓 동맹도 가능.” 『조선일보』 (2012 /01/02).
- 최원기. 2010.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환태평양 파트너십(TPP)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0-2.
- 한강우. 2011. “中 선린외교 무시…美의 中 봉쇄 자초.” 『문화일보』 (2011/11/18).
- Angell, Norman. 1913. *The Great Illusion*. New York: Putnam's.
- Barbieri, Katherine. 2005. *The Liberal Illusion: Does Trade Promote Pea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enson, Michelle A. 2007a. “Extending Power Transition Theory.” *International Interactions* 33(3): 211-215.
- \_\_\_\_\_. 2007b. “Status Quo Preferences and Disputes Short of War.” *International Interactions* 33(3): 271-288.
- Brooks, Stephen G. 1997. “Dueling Realis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3): 445-477.
- Bueno de Mesquita, Bruce. 1981. *The War Trap*.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Cha, Victor D. 2011. “Complex Patchworks: U.S. Alliances as Part of Asia's Regional Architecture.” *Asia Policy* 11(Jan): 27-50.
- Christensen, Thomas J., and Jack Snyder. 1990.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2): 137-168.
- De Soysa, Indra, John Oneal, and Yong-Hee Park. 1997. "Testing Power-Transition Theory Using Alternative Measure of National Capabili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4): 509-528.
- Danilovic, Vesna. 2002. *When the Stakes Are High: Deterrence and Conflict among Major Power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iCiccio, Jonathan M., and Jack S. Levy. 1999. "Power Shifts and Problem Shifts: The Evolution of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3(6): 675-704.
- Efird, Brian, and Gaspare M. Genna. 2002. "Structural Conditions and the Propensity for Regional Integration." *European Union Politics* 3(3): 267-295.
- Fearon, James D. 1995.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3): 379-414.
- Fravel, M. Taylor. 2007/2008. "Power Shifts and Escalation: Explaining China's Use of Force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32(3): 44-83.
- \_\_\_\_\_. 2008. *Strong Borders, Secure N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hina's Territorial Dispu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edman, George. 2009. *The Next 100 Years: A Forecast for the 21<sup>st</sup> Century*. New York: Doubleday.
- Friedman, Thomas L. 2000.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New York: Anchor Books.
- \_\_\_\_\_. 2007. *The World Is Flat 3.0: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Picador.
- Gartzke, Erik, and Joseph Hewitt. 2010. "International Crises and the Capitalist Pea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115 - 45.

- Gilpin, Robert.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 Gowa, Joanne. 1994. *Allies, Adversaries, and International Tra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e, David, and Lyric Hughes Hale. 2003. "China Takes Off." *Foreign Affairs* 82(6): 36-53.
- Hawksworth, John, and Gordon Cookson. 2009. *Beyond the BRICs: A Broader Look at Emerging Market Growth Prospects*. Available at <http://www.pwc.com/la/en/publications/the-world-in-2050.jhtml>
- Hensel, Paul R. 2006. "Starting on the Wrong Foot: Political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Claim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San Diego, CA, March 22-25.
- Ikenberry, G. John. 2000.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ervis, Robert. 2002. "Theories of War in an Era of Leading-Power Peace: Presidential Addr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01."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1-4.
- Johnston, Alastair Iain. 1995.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27(4): 5-56.
- Kacowicz, Arie M. 1995. "Explaining Zones of Peace: Democracies as Satisfied Powers?" *Journal of Peace Research* 32(3): 265-276.
- Kant, Immanuel. 1790[1795]. "Toward Perpetual Peace." In *The Cambridge Edition of the Works of Immanuel Kant: Practical Philosophy*, edited by Mary Gregor, 311-3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edy, Paul. 1980. *The Rise of Anglo-German Antagonism, 1860 - 1914*. Boston: George Allen and Unwin.
- \_\_\_\_\_. 1988.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Random House.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Kim, Woosang. 1991. "Alliance Transitions and Great Power Wa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 833-850.
- Kugler, Jacek, and Douglas Lemke eds. 1996. *Parity and War: Evaluations and Extensions of The War Ledge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mke, Douglas. 1997. "The Continuation of History: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34(1): 23-36.
- \_\_\_\_\_. 2002. *Regions of War and Pe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mke, Douglas, and Suzanne Werner. 1996. "Power Parity, Commitment to Change,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2): 235-260.
- Lemke, Douglas, and William Reed. 1998. "Power is Not Satisfaction: A Comment on de Soysa, Oneal, and Park."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2(4): 511-516.
- Liberman, Peter. 1996. *Does Conquest Pay? The Exploitation of Occupied Industrial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ndelbaum, Michael. 2004. *The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 Peace, Democracy, and Free Marke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Public Affairs.
- Marsh, Peter. 2011. "China Noses Ahead as Top Goods Producer." *Financial Times* (2011/03/13).
-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 York: W. W. Norton & Company.
- Meri, Tomas. 2009. "China passes the EU in High-tech exports."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Available at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OFFPUB/KS-SF-09-025/EN/KS-SF-09-025-EN.PDF](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OFFPUB/KS-SF-09-025/EN/KS-SF-09-025-EN.PDF)
- Most, Benjamin A., and Harvey Starr. 1989. *Inquiry, Log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Mousseau, Michael. 2010. "Coming to Terms with the Capitalist Pea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36(2): 169-184.
-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2009.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Available at [http://www.dni.gov/nic/PDF\\_2025/2025\\_Global\\_Trends\\_Final\\_Report.pdf](http://www.dni.gov/nic/PDF_2025/2025_Global_Trends_Final_Report.pdf)
- Nye, Joseph S. 2000.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New York: Longman.
- Organski, A.F.K. 1958. *World Politics*. New York: Knopf.
- Organski, A.F.K., and Jace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pe, Robert A. 1996.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on in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edersen, Thomas. 2002. "Cooperative Hegemony: Power, Ideas, and Institutions in Regional Integr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8(4): 677-696.
- Pomfret, Richard. 1988. *Unequal Trade: The Economics of Discriminatory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Oxford: Basil Blackwell.
- Powell, Robert. 1999. *In the Shadow of Power: States and Strate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Quackenbush, Stephen L., and Frank C. Zagare. 2006. "A Game-Theoretical Analysis of the War in Kosovo." In *Making Sense of IR Theory*, edited by Jennifer Sterling-Folker, 98-114.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Ripsman, Norrin M., and Jean-Marc F. Blanchard. 1996/1997. "Commercial Liberalism under Fire: Evidence from 1914 and 1936." *Security Studies* 6(2): 4 - 51.
- Russett, Bruce M., and John Oneal. 2001.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 Senese, Paul D., and John A. Vasquez. 2008. *The Steps to War: An Empirical Stud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gnorino, Curtis S., and Jeffrey M. Ritter. 1999. "Tau-b or Not Tau-b: Measuring the Similarity of Foreign Policy Posi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1): 115-144.
-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0. *SIPRI Yearbook 2010: Armaments, Disarmaments, and International Security*. Available at <http://www.sipri.org/yearbook/2010>
- Tammen, Ronald, Jacek Kugler, Douglas Lemke, Allan Stam, Mark Abdollahian, Carole Alsharabati, Brian Efird, and A.F.K. Organski. 2000.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up>st</sup> Century*. New York: Chantham House.
- Thucydides. 1954[460 BC~395 BC].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translated by Rex Warner. New York: Penguin Books.
-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1995.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Available at <http://www.state.gov/t/avc/rls/rpt/wmeat/index.htm>
- Walter, Barbara F. 2003. "Explaining the Intractability of Territori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4): 137-153.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 Weede, Erich. 2010. "The Capitalist Peace and the Rise of China: Establishing Harmony by Economic Interdependence." *International*



Interaction 36(2): 206-213.

Wilkenfeld, Jonathan, Michael Brecher, and Sheila Moser. Crises in the Twentieth Century, Vol 2.: Handbook of Foreign Policy Crises. New York: Pergamon.

WTO(World Trade Organization). 2010.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0. Available at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0\\_e/its2010\\_e.pdf](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0_e/its2010_e.pdf)

### 웹사이트

<http://www.correlatesofwar.org>

<http://www.eugenesoftware.org>

<http://www.globalpolicy.org/security/data/vetotab.htm>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